

현목 스님(승려사 유나)  
금강경은 인류 교과서  
독송하면 뇌세포 안정  
8면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  
계오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21호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 해인사에 呪文 낙서 '훼불의 악몽' 재현

40대 여인, 경내 전각 17곳 훼손... 25일 경찰 검거

훼불의 악몽이 이번에는 국보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해)에서까지 재현됐다. 해인사는 11월 23일 대적광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 17곳에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돼 합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낙서를 한 40대 여성은 수사의뢰 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해인사는 11월 23일 대적광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 17곳에 쓰여진 특정종교 주문 낙서를, 결국 낙서를 한 40대 여성은 수사의뢰 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해인사

검거된 김모(48)씨는 11월 20일 대적광전, 비로전 뒷벽과 독성각, 명부전 등에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특정종교의 주문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낙서했다.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낙서를 했고, 특정종교의 신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종교 기도주문 추정 '侍天主...' 한자 21자 써 '악령 쫓으려 했다' 주장 중요방지법 제정 필요해**

대법원은 이 같은 양형기준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화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해인사 훼불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자신의 종교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 광신도들에게 의해 자행되는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상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인 것은 성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사회 보수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보수 개신교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앞으로 종교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교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졌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대법원이 내년부터 불상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을 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향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손괴죄 범위를 △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 △지정문화재 손괴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상습과 누범, 특수 손괴 등으로 처벌 수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이웃종교 시설 등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즉,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을 훼손했을 경우 3년에서 6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 손괴의 경우 7년까지 형이 늘어나게 된다.

김 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 대문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향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인사 홍보국장 종현 스님은 "이번 사건을 국격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자 훼불 행위"라면서 "전통 문화재에 대한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훼불 양형 기준 높아지나**

국보가 있는 사찰에 까지 훼불이 이어진 데 대해 불교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형 훼불과 종교편향 사건들이 이

### 1021호 INDEX

신행 6  
마가스님의 서울대공원 낙엽길 걷기 명상



문화 20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13일 30주년 음악회



**아름다운동행, 필리핀 재건복구 원공**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11월 26일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완공을 끝으로 380일간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한국에서 파병된 아라우 부대와 협력해 필리핀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복구작업에는 총 4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사진은 타나완 국립고 완공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과 아라우 부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5면> 글=배현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 종교인 과세, 올해도 사실상 무산

국회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서 제외... 정치권 '몸사리기'

**불교·가톨릭 "과세 찬성" 국민 70% 이상 과세해야 개신교 반대로 다시 쟁점**

46년 간 성역으로 있던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측은 종교인 간담회를 열고 이해를 구했지만 개신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올해에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월 26일 지정·발표한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는,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안에 해당돼 심사 단계에 포함됐으며, 11월 24일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종교인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종교 간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불교와 가톨릭은 종교인에 소득세 부과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개신교계는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안은 종교인 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부 교단 측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목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과세점 이하이므로 자발적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이미 종단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조세소위 간담회에서는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이뤄

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46년 동안 정부와 종교계 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다. 70%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2012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은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에서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하지만 개신교계의 반발로 이번이 과세 추진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교 시설은 9만여 소이며 성직자 수는 36만 5000명에 이른다. 일부 유명 목사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다.

실상 세수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2년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의 세미나에서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종교인들의 소득 신고를 통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 △대형 교회 및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다시 종교인 과세가 무산됨에 따라 한동안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에는 총선인,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